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z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cultural investment on local economy

이 병 량\* · 박 윤 환\*\*

Lee, Byung-Ryang · Park, Yoon-Hwan

###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의 방법론
- IV. 분석결과
- V. 결 론

이 연구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의 자생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의 현실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각 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출인 문화예산 비율과 문화적 인프라의 정도가 대표적인 도시경제력 지표인 지역내총생산과 간접적 지표로서 도시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민세 징수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방정부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도시경제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문화전반에 걸친 인프라 수준의 향상은 소득 측면의 도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히 모색되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혹은 재생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투자나 인프라 수준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부산물일 수 있음을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암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주저자)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2. 11. 6, 심사기간(1,2차): 2012. 11. 7 ~ 2012. 12. 27, 게재확정일: 2012. 12. 27

친 기대나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 주제어: 문화투자, 지역경제, 문화예산

Many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stimulate local economic growth by making cultural investments. Given this situ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lications expanding cultural expenditures have for local economies. The unit of analysis in the study is 230 localities in Korea.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cultural investment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cultural budget and the level of cultural infrastructure on local econom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local tax. Findings reveal that financial investment on culture does not positively affect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whereas expanding cultural infrastructure appears to improve local economy in terms of income. The result of these findings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urban renewal strategies focusing on cultural investment; such policies have been frequently implemented by a number of localitie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culture might be a consequence rather than a factor that drives economic development. A final key implication stemming from this research is that many local governments should carefully monitor and evaluate various strategies used for urban development, while taking into account high expectations regard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e.

□ Keywords: cultural investments, local economy, cultural budget

## I. 서론

어느덧 한국 지방자치제도도 약관을 지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초입에 서 있다.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1961년의 군사쿠데타 정부에 의해 법적·실제적 효력이 정지된 이후 1987년의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성립된 제6공화국에서야 지방자치제도는 부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 분권을 통한 권력의 독점에 대한 견제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받

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도시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라는 전제에서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생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수도권 집중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자생력을 침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자율성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역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수도권 지역 역시 경제발전의 지체, 잘못된 재정 투자 등의 영향으로 도시의 자생력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명목만 유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분권을 통한 권력의 독점에 대한 견제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를 틈타고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의도하는 다양한 견해도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문화’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현실적으로 전통적 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소비구조나 한국 노동시장의 여건 하에서 성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도시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한 창조, 교육과 소양의 축적을 통한 향유를 산업적으로 전환·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의 영역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체적으로 ‘문화도시’와 같은 도시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sup>1)</sup>. 예를

1) 원도연(2008)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지방화 시대’의 도시발전전략의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을 ‘문화도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적 발전을 목표로 한 경쟁이 치열해진 지방화 시대의 ‘문화도시’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도시’는 당시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채택하였던 것으로 평가한다.

들면 ‘디자인 서울’과 같은 도시 발전 전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은 도시 발전 전략의 근거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문화에 대한 투자가 도시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가정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실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정부의 문화 투자가 도시 경제를 발전시키는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투자와 도시의 경제 발전을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에 기초하여 면밀하게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야기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문화 투자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측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기술적인 분석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도시의 지역 경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생산과 소득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를 고려하여 생산 측면의 경제적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GRDP)과 소득측면의 경제적 지표인 지방세 중 주민세 자료를 동시에 활용해서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문화 투자 변수 역시도 현 시점에서 도시정부의 재정적 투자를 나타내는 전체 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과 기존에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온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문화 인프라 수준으로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 선행 연구들이 시도한 적이 없는 문화 인프라 지수(Cultural Infrastructure Index: CII)를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 간 문화적 환경 투자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도시정부의 문화투자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소개한다.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 문화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서 자료, 변수, 측정 그리고 모형설정을 포함하는 방법론 장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과 연구가 지닌 한계 및 논점들에 대한 토론으로 이 연구를 매듭지하고자 한다.

2) ‘디자인 서울’은 2006년 7월 취임한 서울시의 민선 4기 시장인 오세훈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단순히 도시 설계나 경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개념을 넘어서 ‘문화’의 중심적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추진한 이 계획은 산업적 관점에서 디자인에 투자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a). ‘디자인 서울’을 주도한 오세훈 시장의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제출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서울경제 활성화’의 정책 목표를 ‘컬처노믹스(Culturenomics)’와 ‘디자인노믹스(Designomics)’의 결합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b).

## II. 이론적 배경

정부는 다양한 근거로 문화에 투자한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목도 그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문화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한다. 이는 이 논문이 수행하는 실증적 연구와 분석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 1. 문화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

문화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서 문화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개념이 그렇듯이 문화라는 개념 역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만큼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교화(cultivation)의 과정이나 상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개념이었다. 즉 정신적이고,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여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의 삶의 양식 전체(entire way of life of a society)’ 혹은 ‘유형화된 생활양식의 전체(patterned way of life)’로 정의하는 문화인류학적 전통의 문화 개념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Huntington, 2000; 김정수, 2010). 이 개념은 특정의 사회나 조직·집단의 삶을 형성하는 가치관, 행동 양식, 관습, 인간 관계 등을 문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들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개입하는 문화의 영역을 한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 문화의 개념은 ‘내부 감정 및 관념의 미적 표현’, 즉 사회의 지적, 음악적, 미술적, 문학적 산물이나 이를 창조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인다. 대중예술을 포함한 예술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Huntington, 2000; 김정수, 2010).

그러나 정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근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문화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민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높이거나, 국가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sup>4)</sup>. 혹은 자유

<sup>3)</sup>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Vol. 2)의 Culture and Cultivation 항을 참고하였다.

<sup>4)</sup> 이와 같은 접근은 ‘국민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後藤和子[임상오], 2004).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문화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이러한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문화에 대한 투자는 어떤 의미에서 취향의 기준(standards of taste)을 설정하는

로운 창작 활동과 이의 향유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삶의 양식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을 포괄하기 위해 이 연구는 문화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을 포함한 한 사회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 전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화의 다양한 국면에 개입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에 대한 개입 가운데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에 접어들기 직전 무렵 수사적으로 사용되었던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였던 '문화의 세기'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지식과 정보의 집약을 통한 창조력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문화가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는 부가가치의 창조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었다. 이는 문화를 생산적인 것과 관련 없는 삶의 양식으로 보거나, 혹은 일정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향유하는 예술 그 자체로 보는 것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문화를 산업의 한 영역으로 보는, 더 나아가서는 '문화는 곧 돈'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up>5)</sup>(김정수, 2010). 즉 문화는 그것이 무엇이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는 돈'으로까지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로 정부의 문화에 대한 투자의 방향과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6)</sup>.

그러나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목은 단순히 현실 정책의 차원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는 보몰(Baumol)과 보웬(Bowen)에 의해 촉발되었다. 보몰과 보웬은 비용질병(cost diseas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는 공

---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화로운 사회를 명목으로 특정한 취향이나 미적 입장을 배제하고 회생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Miller and Yúdice, 2002).

5)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93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의 흥행이었다. 이 영화가 직접·간접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당시 한국 최대산업이었던 자동차 수출 총액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당시의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현실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김정수, 2010). 이러한 이유로 김종엽(1997)은 <쥬라기공원>을 한국의 국책에 영향을 준 영화라고까지 평가한다.

6) 1994년 당시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문화산업국은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전택수, 2003).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김정수(2010)는 '문화산업의 급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문화예산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00년에 들어 처음으로 전체 문화예산 가운데 10%를, 2008년에는 20%를 넘어서고 있다.

연예술의 산업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공연예술은 대량 생산이나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노동집약적·수공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술적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비중은 줄어들기가 힘들고, 더구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반적인 경제 발전 등의 결과로 계속 올라간다면,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예술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몰과 보웬은 밝혀내었다(Baumol & Bowen, 1966; 소병희, 2001: 176-177, 이병량, 2011). 이와 같은 보몰과 보웬의 논리는 문화에 대한 투자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기 보다는 산업으로서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즉 공연예술과 같은 문화산업은 비용질병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문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에 문화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화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주장되고 있는 논의에 따르면 문화는 1) 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 2) 운송, 요식업 등의 관련 분야의 소득에 영향을 주며, 3) 관련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4) 경제 기반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5) 문화환경의 향상으로 경제 잠재력과 관한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Landry, 2000; Throsby[성제환], 2004).

이러한 입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의 전략으로 문화 혹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는 자신의 지역 자체를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정홍익 외, 2008). 지역문화에 대한 투자는 이런 의미에서 도시 자체를 더 좋은 상품으로 가꾸고, 홍보하는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도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은 창의성이나 아이디어 등이 핵심이므로 투자에 비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가, 또한 한번 창출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연쇄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 산업이다(배기형, 2009; 김정수, 2010).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문화의 경제적 효과도 지역 경제에 발생시킬 것으로도 기대된다. 따라서 문화는 중요한 도시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발전 전략을 취하는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다(7).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도시의 발전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본·토지·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산 요소가 풍부한 지역은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여 도시 발전의 지속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진다(정홍익 외, 2008). 이와 같은 경제적 발전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문화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sup>8)</sup>. 따라서 문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는 엇갈린 연구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엇갈린 증거들

정부의 문화 투자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특히 문화 투자의 지역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어스코프(Myerscough[이홍재], 2002)는 이를 예술부문의 소비지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최초의 구매가 경제에 투입되어 나타나는 추가적인 소득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승수효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 1981년부터 86년까지 영국에서 23%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구문모(2001), 박진수(2001)의 경우는 지역개발 전략에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화산업의 경제적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문화상품을 생산하여 역외로 판매하고, 공연, 축제 등에 문화관광객을 유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역외 소득 유치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의 조성으로 기대되는 역내 소득의 역외로의 유출 방지라는 것이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김은경·변병설(2006)이나 서준교(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의 관점에서 채택되고 있는 '문화도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화도시 전략을 통한 문화에 대한 투자가 고용창출과 투자의 확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 기반의 개선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상오(2004)의 연구는

7) 위의 각주 1)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많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세웠던 '문화도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는 문화에 대한 수요의 특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문화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수요는 '획득된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비교적 긴 시간의 노출이 다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김문환, 1997).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축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투자인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관람객의 유입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수익의 창출이라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홍재(2002) 역시 춘천인형연극제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여타 산업부문의 생산증대효과 3억 8,600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2억 700만원, 지역경제 고용창출효과 연간 35.34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약 112억의 생산유발효과와 53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5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김연형(2008)의 연구도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지역 경제발전의 격차가 정부의 문화지출을 포함한 문화적 요인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김상욱(2012)의 연구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Heilbrun & Gray[이홍재], 2000)은 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많은 경우들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다(임학순, 2003). 이와 같이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회의론은 Bennett(1997) 등의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창조도시’나 ‘문화도시’와 같은 도시 발전 전략이 반드시 도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진 정성훈(2012)의 연구가 있다. 정성훈(2012)은 창조도시론이나 문화도시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한 표현으로 우수 인력을 흡수하려는 도시 간의 경쟁이라는 맥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불평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창조도시나 문화도시 보다 평등한 발전이 이루어진 산업도시가 더 인간이 살만 한 곳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인문학적 반성이나 사유와는 별개로 다양한 실증적 연구도 문화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문화도시와 같은 도시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구세주·유승훈(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전혀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여타 산업에 비해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는 창의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가 실제 다른 산업의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 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지역축제 방문객 수의 과

대 추정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일인당 지출비용 과대 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이희찬(2001)이나 이진형(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임상오(2004)는 지역문화축제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경제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의 개념인데, 당시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이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문화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엇갈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는 원인은 많은 경우 이들 연구가 특정 도시의 문화투자전략이나 혹은 구체적인 개별 지역문화축제 등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지방정부의 문화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곧 분석의 대상을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부문에 지출하고 있는 투자, 즉 문화예산과 생산 측면의 도시 경제력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GRDP)과 소득 측면의 경제적 지표인 지방세 중 주민세 징수액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도시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의 요인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시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는 존재해왔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설명은 도시경제 발전에 인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구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나 도시화 경제를 형성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9). 뿐만 아니라 인구의 규모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 시장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인구의 규모나 밀도는 기술개발이나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구의 규모는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전제라는 것이다(홍기용, 1999). 단순한 인구 규모나 밀도뿐 아니라 인구의 구조적 특성도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특정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대책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지역의 썩크탱크들은 관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당면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충북발전연구원, 2011).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산업 및 노동구조적 요인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경제의 발전이나 성장은 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된 노동인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10). 또한 이러한 고용된 노동인구의 질 역시 중요한 도시경제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인구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교육이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는 이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진 노동력을 유인하게 되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 및 연구기관의 존재는 도시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O'Sullivan[이번송], 2007).

도시경제 성장에는 도시의 입지 요건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도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도시의 입지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 위성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등을 그 구체적인 형태로 들 수 있다(홍기용, 2004).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인 군, 중소도시인 시 지역, 그리고 구를 기초단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변수와 함께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도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Fisher, 1997).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형적인 지역 기반의 공공 서비스로서 지역의 빈곤율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끈다는 주장이나 (Rogerson, 2003; 박미옥, 2007)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분야들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시킬뿐더러 잠재인력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켜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논의(이형하·정성일, 2009)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지역 경제가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지역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공원녹지 조성의 수준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매개되어 중산층 이상 계층들의 거주 선호지역의 선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최유진, 2011).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뒤따르고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의 재정적 능력은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Peterson, 1981).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지출은 무조건적으로 도시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된다. 즉 공공지출을 통해 제공된 공공서비스가 교육이나 사회적 간접자본이나 공공안전 등에 집중되는 경우는 도시의 상대적 유인력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프로그램에 지출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상대적 유인력을 감소시키고 도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O'Sullivan[이번송], 2007). 이와 같은 주장은 도시의 삶의 질이나 복지와 관련된 요인의 도시 경제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도시의 삶의 질이나 복지 등의 요인이 그 지역에 대한 상대적 유인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은 그 지역에 대한 유인력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투자가 도시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 Ⅲ. 연구의 방법론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이다<sup>9)</sup>. 도시경제에 문화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는 종속변수인 도시경제와 주 독립변수인 문화 투자이다. 먼저 종속변수의 경우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도시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생산 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지역 경제력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과 지역의 재정력 및 소득 측면의 지역 경제성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 중에서 특히 주민세 징수액을 사용하였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이 변수들의 값은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누어 표준화시켰다. 이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변수의 경우 아직 서울시가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을 제외한 205개 시·군·구 지역들에 대한 자료만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과 주민세 변수들은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의 생산측면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는데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나 생활수준 등을 보여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주민세 변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역 소득의 대리변수로 폭넓게 활용할 정도로 지역의 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지역의 생산성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력이 미흡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시간적으로 두 종속변수들은 모두

9) 제주도를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시군구 단위로 제주도 지역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 및 독립변수들에 대한 자료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다.

10) 한편 주민세 변수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한 종류인 주민세가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세 소득할 자료의 사용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소득할 통계 자료의 비

2009년 자료인데 이는 분석모형의 독립변수들이 모두 2008년 자료인 점에서 구별된다. 특정 시점의 지역 경제의 측정 지표는 시점 이전의 영향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시간적 차이를 돕으로써 인과성을 보다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편 종속변수에 대한 자료는 각 시·군·구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의 재정 및 지역내총생산 부분에서 입수하였다.

지역의 문화 투자를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의 측면이고, 둘째는 지역에서 운영 및 관리중인 문화인프라의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관련 영역에 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가는 지역 문화 투자의 핵심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대비 문화예산 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문화예산 자료는 문화행정의 정부 공식통계인 문화통계포털(<http://culturestat.mcst.go.kr>)의 지역문화통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가 작성한 <2008년 시군구별 문화체육관광 예산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한 것이다. 재원 투자와 함께 문화 투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역의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의 정도이다. 사실 이 두 변수는 지역의 문화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맥락을 갖지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문화예산은 훨씬 더 역동적인 지역의 직접적 문화투자 수준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문화인프라는 그동안 축적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나타낸다고 할 때 두 변수의 해석은 달리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인프라 구축은 현 시점에서 재정을 문화부문에 투입하는 문화예산 비율과는 달리 이미 기존에 문화부문에 투자된 자원의 크기이다. 문화인프라 측정을 위해 이 연구는 인프라의 영역을 문화재 영역(변수: 문화재 수), 문화제도 영역(변수: 문화조례 수), 공연전시 영역(변수: 공연 및 전시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영역(변수: 지역문화센터 및 도서관 수) 등 4가지 범주와 이에 상응하는 변수들을 사용했다. 문화관련 조례 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출하는 활동 영역들인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관련 자치법규들의 숫자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230개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들을 검색하여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일부 시스템에서 누락된 자치단체들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치법규 내용을 찾아서 보완하였다. 문화재 수 변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 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를 통하여 지도에 기록된 문화재 정보들을 해당 시·군·구별로 합계를 낸 것이다. 이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를 모두 아우르며 지역의 문화재 자원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큰 잇점이 있다. 공연 및 전시

공개 때문에 지방세 변수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있다(최유진 2011). 하지만 실제 주민세에서 균등할의 비중은 겨우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까지 자료 공개가 되고 있는 주민세 총액 자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박완규, 2010).

시설 수 변수는 지역 내 위치한 공공 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장, 미술관, 화랑 등을 포함하며, 지역문화시설 및 도서관 수 변수는 시·군·구민회관 및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문화시설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www.laiis.go.kr>)>에서 입수하였다. 4가지 문화인프라 영역들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문화인프라 지수는 아래의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되었다.

$$CII_i = \frac{CA_i}{CA_m} \times 25 + \frac{CL_i}{CL_m} \times 25 + \frac{PD_i}{PD_m} \times 25 + \frac{CF_i}{CF_m} \times 25$$

수식에서  $CII_i$ 는 특정 시·군·구  $i$ 의 문화인프라 지수(Cultural Infrastructure Index: CII)를  $CA_i$ 와  $CA_m$ 은 각각 특정 시·군·구  $i$ 의 문화재 수와 해당 변수의 최대값인 가장 문화재 수가 많은 시·군·구의 값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CL_i$ 와  $CL_m$ 은 특정 시·군·구  $i$ 의 문화조례 수와 해당 변수의 최대값을,  $PD_i$ 와  $PD_m$ 은 특정 시·군·구  $i$ 의 공연 및 전시장 수와 해당 변수의 최대값을, 마지막으로  $CF_i$ 와  $CF_m$ 은 특정 시·군·구  $i$ 의 지역문화센터 및 도서관 수와 해당 변수의 최대값을 각각 대표한다. 4개 영역은 25% 비중으로 균일하게 가중치가 적용되어 문화인프라 지수에 반영되었다. 문화인프라 지수는 이론상 만약 특정 자치단체가 네 영역에서 모두 최대값을 가질 때 최대 100이며 모두 0의 값을 가질 때 최소 0이 된다. 결국 문화인프라 지수가 커질수록 지역의 문화관련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미 구축된 문화인프라 수준과 문화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현재 시점에서의 예산지출은 다른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문화투자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0.25를 나타내서 결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의 통계변수들을 사용한다. 우선 인구 통계적 특성들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출산율과 청년인구비율 변수들을 채택하였다. 출산율 변수는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말하며, 청년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10~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간 및 지역 재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 지역을 베이스 케이스로 정하고 군 지역 및 구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변환시킨 지표로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값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지역의 산업 및 노동인프라 특성이다. 지역의 생산 요소 측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업체 수, 제조업 종사자 수, 공장용지면적, 대학수 변수들이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사업체 수 변수와 제조업 종사자 수 변수는 인구 1,000명 당 지역의 사업체 수 및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지목별 토지현황 자료에서 추출한 공장용지면적 변수는 전체 지역 면적에서 공장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지역의 지식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대학 수 변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숫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질 및 복지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 내 병상 수, 공원면적, 사회복지시설 수 등의 변수들을 채택하였다. 이때 병상 수 변수는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를, 공원면적 변수는 인구 1,000명 당 공원면적, 사회복지시설 수 변수는 인구 10,000 명 당 사회복지시설수를 의미한다. 전체 통제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입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회귀 분석모형을 수립하였다<sup>11)</sup>. 모형은 종속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가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인 생산요소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이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가 1인당 주민세 징수액인 지역소득에 초점을 맞춘 지역 경제 모형이다. 세부적인 모형의 내용은 아래 수식1,2와 같다.

$$\text{수식 1. } G_i = \alpha_1 + \alpha_2 CE_i + \alpha_3 CI_i + \alpha_4 BR_i + \alpha_5 Y_i + \alpha_6 GN_i + \alpha_7 GU_i + \alpha_8 FI_i + \alpha_9 B_i + \alpha_{10} ME_i + \alpha_{11} FA_i + \alpha_{12} CO_i + \alpha_{13} H_i + \alpha_{14} PA_i + \alpha_{15} W_i + v_i$$

$$\text{수식 2. } T_i = \beta_1 + \beta_2 CE_i + \beta_3 CI_i + \beta_4 BR_i + \beta_5 Y_i + \beta_6 GN_i + \beta_7 GU_i + \beta_8 FI_i + \beta_9 B_i + \beta_{10} ME_i + \beta_{11} FA_i + \beta_{12} CO_i + \beta_{13} H_i + \beta_{14} PA_i + \beta_{15} W_i + \epsilon_i$$

11) 본 연구는 애초에 문화투자와 경제수준 사이의 인과성이 상호적(reciprocal)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상호적 인과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2단계제곱(Two-stage Least Squares) 모형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고안한 도구변수 회귀모형이 내생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Wu-Hausman Test를 시행한 결과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곧 도구변수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OLS 모형을 사용하게 되었다.

위 식에서 종속변수  $G_i$ 와  $T_i$ 는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지역내생산액과 1인당 주민세 징수액이다. 문화 투자를 보여주는 두 가지 독립변수인 전체 예산대비 문화예산 비율과 문화인프라 지수는 각각  $CE_i$ 와  $CI_i$ 로 대표된다. 그 외  $BR_i$ 는 출산율,  $Y_i$ 는 청년인구비율,  $GN_i$ 는 군 지역(더미 변수),  $GU_i$ 는 구 지역(더미 변수),  $FI_i$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B_i$ 는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ME_i$ 는 인구1천명당 제조업분야 종사자수,  $FA_i$ 는 전체 면적대비 공장부지 면적 비율,  $CO_i$ 는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 수,  $H_i$ 는 인구 천 명당 병상수,  $PA_i$ 는 전체 면적대비 공원 면적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W_i$ 는 인구 만 명당 복지시설 수이고  $v_i$ 과  $\epsilon_i$ 는 방정식의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한다.

시·군·구 지역들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지역들은 큰 지역들보다 오차변량(error variances)이 더 크다. 따라서 두 분석 모형들은 모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인구수에 의해서 가중(weighted)되었다. 일련의 기초 통계 및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TATA11이다.

## IV. 분석결과

먼저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서술통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지역경제 관련 변수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수는 평균이 22.17이고 최소값 7.13, 최대값 117.75, 표준편차 22.17로 나타나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수준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1인당 주민세 변수 역시 평균이 148.67이고 표준편차가 308.81이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20배 가까이 이르러서 역시 상당한 수준의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 독립변수인 문화투자 관련 변수들도 문화예산 비율 변수의 경우 평균이 5.28%였으며 최소값 0.31, 최대값 23.64, 표준편차 3.75로 나타나서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산 비중에서 격차가 나타났고, 문화인프라 변수 역시 상대적으로 큰 지역적 변이(variation)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통제변수들의 경우 출산율은 평균 1.29, 청년인구비율 평균은 40.74%였고 더미변수인 군지역과 구 지역 변수는 각각 0.35와 0.30을 나타내서 베이스 케이스인 시 지역을 포함해서 3가지 공간적 범주들이 30~35% 내외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기타 재정자립도, 사업체수, 제조업 종사자수, 공장면적비율 등 상당수 통제변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들 간의 적지 않은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1〉 서술통계 결과<sup>12)</sup>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 경제	1인당 GRDP	205	22.17	14.10	7.13	117.75
	1인당 주민세	230	148.67	308.81	22.56	4017.33
문화 투자	문화예산비율	230	5.28	3.75	0.31	23.64
	문화인프라	230	16.06	7.70	3.33	68.04
인구 통계	출산율	230	1.29	0.24	0.79	2.21
	청년인구비율	230	40.74	6.42	24.33	52.24
공간/재정	군 지역	230	0.35	0.48	0	1
	구 지역	230	0.30	0.46	0	1
	재정자립도	230	28.24	16.87	6	83
산업/노동	사업체수	230	71.76	37.07	38.44	469.31
	제조업종사자수	230	64.56	81.90	4.09	826.88
	공장면적비율	230	1.56	3.66	0	33.91
	대학 수	230	1.47	1.80	0	12
복지/삶의질	병상 수	230	10.53	6.33	0	39.5
	공원면적비율	230	0.80	1.92	0	16.45
	사회복지시설	230	11.18	7.44	0.3	40.30

〈표-2〉는 생산요소와 소득요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결정요인을 문화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지역생산경제 모형과 지역소득경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13)</sup>.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요소에 초점을 맞춘 지역생산경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이 라고 할 수 있는 보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quare) 값이 0.49로 나타나서 모형의 독립변인들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변이(variation)의 약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모형의 통제변수들 중에서 출산율, 구 지역(더미), 재정자립도, 그리고 사업체 수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변수들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구 지역이며, 사업체 수가 많고 제조업 종사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생산적 측면의 지역 경제는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연

12) 주요 변수들의 단위: 1인당 GRDP(백만원), 1인당 주민세(천원), 사업체수(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수(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인구 만 명당)

13)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산한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의 값은 3이하로 나왔고 일반적인 판정기준인 1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화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예산 비율 변수와 문화인프라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생산적 측면의 지역경제에 문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예산의 투입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뿐더러 지역의 축적된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문화관련 제도 및 물리적 문화인프라도 역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의 투입이 단기적으로 지역의 생산요소의 경제력 향상을 이끌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1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문화투자가 지역경제에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투자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더라도 분석결과는 동시에 문화예산 투자와 문화 인프라 확충이 소위 지역공공재로서 갖는 맥락에서 고찰해볼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투자는 지역 내 문화관련 시설 확충 및 이벤트 지원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지역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공재는 지역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외부효과를 낳기도 한다(오병기, 2005).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를 부정하고 도시 정부들의 공공재 제공의 경쟁을 통한 선호지역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한 티부(Tiebout, 1956)의 가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문화와 같은 지역공공재는 현재와 같이 이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서비스 편익과 비용의 지리적 불일치를 야기시켜서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쉽다. 즉 특정 지역의 문화의 투자가 곧바로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편익의 집중을 필연적으로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역경제에 문화투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을 실제 문화투자가 갖는 파급효과의 시간적 맥락과 함께 공공재적 성격에서 기인한 외부효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2>에서는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를 평균 0, 표준편차 1을 갖도록 표준화시켰을 때 (standardized) 얻어지는 회귀 계수인 표준화된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beta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계수를 통해서 모든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 추정치를 같은 규모(scale)로 취급함으로써 어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지역생산경제 모형에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가 제조업 종사자 수 변수로 나타났다고 이어서 출산율, 사업체수, 구 지역, 재정자립도 순서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회귀분석 결과

	지역생산경제 모형 (종속변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경제 모형 (종속변수: 1인당 주민세)	
	b	beta	b	beta
문화투자				
문화예산비율	0.37**	0.10	-1.21**	-0.02
문화인프라	0.12**	0.07	3.31**	0.11
인구통계				
출산율	17.86**	0.27	201.62**	0.16
청년인구비율	-0.16**	-0.07	0.97**	0.02
공간/지역재정				
군 지역	2.02**	0.05	80.81**	0.09
구 지역	2.96**	0.22	158.12**	0.30
재정자립도	0.14**	0.19	6.14**	0.42
산업/노동 인프라				
사업체 수	0.18**	0.24	6.84**	0.73
제조업 종사자 수	0.08**	0.46	0.14**	0.04
공장면적 비율	0.14**	0.04	-5.08**	-0.07
대학 수	-0.45**	-0.07	-9.56**	-0.07
삶의 질/ 복지				
병상 수	-0.14**	-0.06	-3.71**	-0.07
공원면적 비율	-0.50**	-0.09	-6.91**	-0.06
사회복지시설 수	-0.10**	-0.04	0.03**	0.001
Adjusted $R^2$	0.49		0.75	
F	15.27		50.96	
N	205		230	

\*\* $p \leq 0.01$ ; \* $p \leq 0.05$

〈표-2〉는 또한 지역생산경제모형에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요소에 초점을 맞춘 지역 소득경제 모형의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1인당 주민세 변수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소득모형의 보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quare) 값은 0.75로 1인당 주민세가 모형에 의해서 약 75%정도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서 살펴보았던 지역생산경제 모형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동일한 독립변수들이 사용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지역내총생산보다는 주민세에 대해서 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회귀분석모형의 결과는 통제변수들 중에서 출산율, 구 지역(더미), 그리고 사업체 수 변수들이 모두 정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대학 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먼저 살펴본 지역생산경제모형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출산율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구 지역이며,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소득 측면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요한 문화투자와 관련된 문화예산비율과 문화인프라 변수에 대하여 문화예산비율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데 반해서 생산경제 모형의 결과와는 달리 문화인프라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측면은 물론 소득 측면에서의 지역경제를 문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접적 예산투자의 확충을 통해서 발전시킨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축적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관련 제도 및 물리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소득 측면의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 시점에서의 문화예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곧바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로 녹아들어가서 문화적 역량을 키운다면 결국 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펼친 문화부문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문화전반에 걸친 인프라조성에 비해서 지역의 소득기반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준화된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통해 독립변수들이 지역의 소득 측면 경제수준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어서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구 지역 더미, 출산율, 문화인프라 순서로 1인당 주민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의 비율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문화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투자의 급격한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확장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투자가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의 자생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의 현실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지출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산 지출의 확대 추세는 이를 위해 전체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각 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출인 문화예산 비율과 문화적 인프라의 정도가 대표적인 도시 경제력 지표인 지역내총생산 과 간접적 지표로서 도시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민세 징수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방정부의 문화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도시경제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문화전반에 걸친 인프라 수준의 향상은 소득 측면의 도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로는 향후 지역의 인구증가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갖는 출산율, 지역 경제의 경기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사업체의 수, 도시정부의 재정 및 공간적 측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와 구 지역 등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친편일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히 모색되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혹은 재생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도시경제 발전을 이끄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경제 발전의 과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이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문화 부문에 대한 도시정부의 투자가 실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즉 문화부문에 대한 도시정부의 전 해년도 재정적 투자가 실제 이듬해 도시경제의 발전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랜 기간 축적되었던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 조성의 정도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 내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문화에 대한 무리한 재정적 투자보다는 지역 경제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히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시급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서두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막연한 기대와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논리가 도시의 자생과 지방자치제도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과 이에 따른 문화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왔던 문화투자가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조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연구

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내총생산 자료 가운데 서울의 기초자치 단체들이 누락되어 있다. 그 때문에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이 배제되어 있는 지역 생산 경제 모형의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 시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08년 문화예산 및 문화 인프라와 2009년 지역 경제 사이의 인과 관계에는 불과 1년 차이의 시차적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문화에 대한 투자가 곧바로 가시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시계열분석이나 다양한 종 단자료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자료 수집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문화 예산 자료들은 최근에야 비로소 일관성 있는 자료로 새롭게 축적되기 시작되었고 일부 시군 구 지역들의 경우는 지역 경제수준 측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제대로 완성된 시계열이나 종단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변이에 따른 영향을 모형에서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과성 규명에 있어서의 시차적 맥락의 고려는 향후 보다 완전한 정부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 기간에 걸친 시간적으로 통일되고 내용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문화예산, 지역 경제, 그리고 기타 지역단위 자료들의 수집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 등을 이용한 패널자료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는 인과성의 상호적(reciprocal) 특성이 있다. 즉 지역 경제가 문화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비록 현 단계에서는 문화 투자가 지역의 경제 발전에서 지닌 실체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방향을 한정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의 동력인지 과실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여 두 변수간의 인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으로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이용한 이단계제곱(2 Stage Least Squares)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문모.(2001). 지역개발과 지방 문화산업정책, 『문화경제연구』, 4(2): 1-20
- 구세주·유승훈.(2009).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22(6): 2805-2821
- 김문환.(1997).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상욱.(2012). 중국의 지역경제발전격차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24(1): 133-156
- 김연형.(2008). 지역문화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주 국제 영화제를 중심으로, 『응용통계연구』, 21(1): 125-140
- 김용웅·차미숙·강현수.(2009). 『신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김은경·변병설.(2006). 문화도시의 충족조건: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441-458
-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개정판)』, 집문당
- 김종엽.(1997). <주라기공원>: 공릉의 계급성과 인종성, 『리뷰』, 제12호
- 박미옥.(2007).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189-226.
- 박완규.(2010).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6(4): 75-101
- 박종화·윤대식·이종열.(2010). 『지역개발론(제2개정판)』, 박영사
- 박진수.(2001). 문화산업과 도시개발전략, 『문화경제연구』, 4(1): 1-17
- 배기형.(2009). 『문화경제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2011a). 『2011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_\_\_\_\_.(2011b).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 서준교.(2006). 문화도시전략을 통한 도시재생의 순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Glasgow의 문화도시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97-221
- 소병희.(2001). 예술에 대한 지원: 논리적 근거와 현황, 『문화경제학 만나기』, 한국문화경제학회  
지음, 김영사
- 오병기.(2005).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산과 지방재정지출의 역외 유출입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6(4): 81-100.
- 원도연.(2008). 문화도시론의 발전과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13: 137-164
- 이병량.(2011).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 두 도시 이야기,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및 도시문화발전전략(한국지방정부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85-99

- 이진형.(2007).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추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1): 11-30
- 이형하·정성일.(2009).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238-248.
- 이홍재.(2002).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 이희찬.(2001).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정방법 연구: 2000 광주비엔날레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25(2): 155-176
- 임상오.(2004).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문화경제연구』, 7(1): 51-75
-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도서출판 진한도서
- 전택수.(2003). 지식정보시대의 문화산업정책의 방향,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김복수 등 편, 보고서
- 정성훈.(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1): 385-408
-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2008).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 충북발전연구원.(2011).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 『도정기획과제 2011-2』, 충북발전연구원.
- 최유진.(2011).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의 지역문화: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패널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163-185
- 최재승.(2001).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21세기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 모색』, 나무와 숲
- 홍기용.(1999). 『지역경제론(제5전정판)』, 박영사
- \_\_\_\_\_.(2004). 『도시경제론』, 박영사
- 後藤和子.(2004). 『문화정책학: 법·경제·매니지먼트(文化政策學: 法·經濟·マネジメント)』, 임상오 역, 도서출판 시유시
- Baumol, William J. and William G. Bowen.(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Bennett, O.(1997). Cultural Policy, Cultural Pessimism and Postmodernism,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4, No.1
- Fisher, Ronal.(1997). The Effects of State and Local Public Services on Economic Development, *New England Economic Review*, March/April: 53-82.
- Heilbrun, James and Charles M. Gray.(2000). 『문화예술경제학(*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이홍재 역, 살림출판사
- Huntington, Samuel P.(2000). Cultures Count,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edited by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Basic Books

- Landry, C.(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Near Stroud: Comedia
- Miller, Toby and George Yúdice.(2002). *Cultural Policy*, London·Thousand Oaks·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yerscough, John.(2002). 예술부문의 경제구조(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이흥재 역, 문자향
- O'Sullivan, Arthur.(2007).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5th edition*)』, 이번송 역, 박영사
- Peterson, Paul.(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gerson, Christian.(2003). Towards Pro-po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for Sectoral Targeting in South Africa, *Urban Forum*, 14(1): 53-79.
- Throsby, David.(2004). 『문화경제학(*Economics and Culture*)』, 성제환 역, 한울아카데미
- Tiebout, Charles.(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Vol. 2),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